

콜의 경제계획의 원칙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기본소득이 낯설고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제법 오래된 역사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말 그대로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역사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적 지위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부상한 구체적 맥락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이 아이디어가 진전하는 조건과 이를 가로막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경제계획의 원칙』의 저자인 G. D. H. 콜(1889~1959)은 영국의 정치 이론가이자 경제학자다. 콜은 자유 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로서 민주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달성하고자 한 페이비언 협회의 회원이자 협동조합운동의 지지자였다.

1920년대 후반부터 노동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분배 방식으로 “국가보너스” 혹은 “모두를 위한 배당”을 지지한 콜은 계획경제의 필요성, 장점, 운영 원리 등을 다룬 이 책에서 다시 한 번 시민의 권리(civic right)로서 모두에게 동등한 액수가 지급되는 배당을 계획경제 분배 체계의 주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번역한 곳은 G. D. H. Cole, Principles of Economic Planning, London, 1935, pp. 226~237이며, 원문 전체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s://archive.org/details/in.ernet.dli.2015.50252>.

경제계획의 원칙들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계획이 도입될 경우, 분명 기존의 소득분배를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며, 분명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적 편익과 사회정의라는 관념에 따라 생산을 계획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입될 편익과 정의의 기준은 무엇인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수요가 아니라 필요가 생산적 활동의 가치를 판단하는 제일의 기준이 될 것이다. 전체 사회가 합리적인 모든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도의 빵을 소비하는 정도에 이를 때까지 빵의 필요가 케이크의 수요보다 우선할 것이다. 좀 더 넓게 보아 문명화된 삶의 필수재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두루 공급할 필요가 이용 가능한 생산 자원에 대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청이 될 것이다. 음식, 연료, 의복, 주택, 교육, 기타 공동 서비스의 만족할 만한 수준의 최저선이 계획경제가 만족시켜야 하는 사회적 요청으로서 그 무엇보다 우선시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선진 사회에는 필수재나 사치재로 분류되지 않는 광범위한 재화와 서비스가 있다. 빵, 주택, 교육 등과 같은 것은 어느 최소 수준까지는 해당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필수적이다. 담배, 영화, 연극, 맥주, 최소 수준을 넘어서서 공급되는 기초적인 필수재 등과 같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재가 아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부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는 최소 소득을 모든 사람이 가지

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가 무엇을 구매하는가는 대부분 그의 일이다. 그리고 더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다. 보편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용할 수 있는 생활 수준의 필수적인 부분을 이루는 추가적인 재화와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생산 자원에 대한 두 번째 요청이 될 것이다.

일차적인 필수재 영역에서는 계획경제가 무엇을 먼저 생산해야 하는지가 분명할 것이다. 물론 필수적인 보편적 최소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고, 따라서 일차적인 요청의 총규모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필수재(substitutable necessities)”라 부를 수 있는 두 번째 영역은 분명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가 두 번째 부류의 재화와 서비스에서는 개별 시민이 선호하는 것을 가능하면 넓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그의 정해진 소득 내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가정하면, 계획경제가 대응해야 하는 대체할 수 있는 필수재에 대한 수요의 구조는 소득분배에 의존한다는 것이 분명해지며, 일정한 소득분배 이외에는 생산에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일차적인 필수재는 모두에게 무상으로 분배될 수 있다. 혹은 판매될 경우 그 가격은 필요한 최소량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낮출 수 있다. 혹은 최소 소득을 넘어서는 소득분배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 없이 모두에게 기본 최소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 가운데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있는 필수재의 생산을 계획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소득분배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거나 계획적인 소득재분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주의 계획가들은 기존의 소득분배를 이 두 번

제 영역의 적절한 정의의 기준 혹은 생산의 방법의 적절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는 기존의 소득분배가 사치재 생산의 기준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그들은 정의로운 혹은 적절한 생산계획에 선행하는 조건으로 소득분배를 계획해야 한다는 충동을 가질 것이다. 적어도 이 문제는 일차적인 필수재의 최소를 계획한다는 첫 번째 문제를 다룰 때 곧바로 직면할 문제다.

그들은 곧 이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차적인 필수재와 이차적인 필수재는 대체로 같은 유형의 재화와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주택은 일차적인 필수재다. 좀 더 좋은 주택은 대체할 수 있는 필수재일 뿐이다. 더 좋은 주택은 사치재다. 각각의 범주에 얼마나 큰 규모의 집이 속해야 하는지는 우선 그 사회가 성취할 수 있는 생활수준에 의존하며, 거기에 사는 가족 규모에도 의존하고, 더 나아가 일부 경우에 가족의 분위기와 직업에 의존한다. 일정한 양의 고기는 일차적인 필수재이며, 좀 더 많은 양의 고기는 대체할 수 있는 필수재이고, 더 많은 고기는 사치재다. 어쨌든 이는 거의 모든 범위의 일차적인 필수재에 해당하는 일이다. 일차적인 필수재의 생산계획, 대체할 수 있는 필수재의 생산계획, 사치재의 생산계획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의 산출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같은 것을 다른 양으로 생산하는 계획이다. 세 부분의 생산계획은 분리될 수 없다. 일차적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광범위한 상품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그것은 이차적인 분류와 삼차적인 분류 사이에 겹쳐 있다. 거의 모든 대체할 수 있는 필수재는 어떤 한정된 양 이상을 가질 경우 사치재가 된다.

이로 인해 소득에 대한 사전적인 계획을 예외로 하면 사회정의나 사회적 편의에 기초해서 생산을 계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한된 범위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할 때, 어떤 사회가 그 구성원이 적절하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만족시킨 후 자기 소득을 특정한 것에 지출하기를 원해야 할 명확한 이유는 없다. 예를 들어 약물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소비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고, 따라서 이 영역의 생산은 엄격한 의학적 목적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독주와 같은 것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약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그런 재화에 높은 가격을 매겨 그 가격에 따른 수요로 생산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어떤 종류의 상품은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비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합리적인 양을 무료로 공급하거나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보조금을 주는 시립 극장이나 오케스트라가 이런 유형의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하면,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소득분배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독주 혹은 극장 좌석에 대해 가격을 정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소득분배가 어떻게 되는냐에 따라 아주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별한 종류의 소비를 자극하거나 줄이기 위해 고안된 가격정책은 주어진 소득 구조의 관점에서만 그 틀을 만들 수 있다.

필수재의 최소 수준 이상의 대부분의 것에 대해 국가는 사회적 토대에 근거해서 소비를 자극하거나 줄이는 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몇몇 경우에 어떤 특정 형태의 소비를 자극할 강한 경제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한 종류의 재화의 산출량이 쉽게 증대될 수 있고, 따라서 총 산출이 늘어나면서 단위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사회적 편익이라는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 않은 이런 경우는 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충족할 수 있다. 수요가 가격 하락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경우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어진 소득 구조 내에서 해당 재화를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 다른 재화를 더 많이 공급하는 것보다 덜 요구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산 영역의 더 넓은 부분을 넘어서서 계획경제의 과제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지령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수요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것이 된다. 담배가 아니라 축음기, 자동차가 아니라 더 넓은 주택, 베이컨이 아니라 양고기에 대한 선호를 표현하는 것은 계획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될 것이다. 실제로 다른 모든 것에 대해 또 다른 어떤 것을 선호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물건이 판매될 경우 소비자는 제공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공급량을 사들이는 것을 통해서만 혹은 살 수 있는 모든 공급량보다 더 많은 수요를 보임으로써만 혹은 전혀 사지 않는 것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계획 당국은 제안된 판매 가격으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지 올바르게 예측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양을 정확하게 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가격을 낮추어 재고를 소진하거나 부패하지 않는 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다음 생산 시기에 필요한 산출고를 줄일 것이다. 수요를 지나치게 낮게 잡았을 경우,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좀 더 적절한 방법으로는 공급을 늘려서 살 수 있게 되기 전까지 일부 사람들이 적게 사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 무계획경제가 관리되는 방식과 거의 같은 것이다. 어떤 생산물을 단일 기업가 집단이 독점할 경우, 이 집단은 주어진 가격에 얼마나 팔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려 할 것이고, 가격이나 추가 생산을 조정함으로써 오류를 교정하려 할 것이다. 경쟁 조건일 경우, 각각의 경쟁 기업가들은 경쟁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까지 추가로 고려하면서 동일한 노력을 한다. 차이는 현행 체제 하에서는 각각의 기업가가 가격과 산출을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해 조정하지만 계획경제에서는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는 최대의 산출을 내놓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볼 것이다. 현재로서는 유사성에만 관심을 둔다. 계획경제와 무계획경제 모두 생산자가 팔려고 하는 가격에 소비자가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 맞추어 산출을 조정한다는 동일한 필요가 있다.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준비는 소득에 의해 제한된 욕망의 표현이다. 소비자는 각각 제한된 총 구매력이 있으며, 각각은 다소는 합리적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노력을 들인다. 그러므로 수요는 두 가지 구별되는 요인에 의존하는데, 이는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가격에서 결합되어 드러난다. 수요의 구조는 결여^{want} 혹은 결여의 상대적 긴급성의 변화에 의해 혹은 소득분배의 변화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각각 100파운드인 두 묶음이 있다고 하자. 100파운드는 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는 1파운드씩 100명에게 준다고 하자. 수요의 효과는 아주 다를 것이다. 일 년 후에 이 과정을 반복할 경우, 이미 일어난 유행의 변화가 상대적 결여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두 묶음의 100파운드가 다소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게 만들 것이다.

아무리 솜씨가 좋다고 하더라도 계획 당국이 유행의 변화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분명 불가능하다. 계획경제가 소비자가 구매하기를 원하는 다양한 물건을 정확한 비율로 생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수요 흐름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가능한 한 생산구조를 유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규모 생산자와 대규모 거래자에게는 모두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큰 힘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예측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이 힘은 계획경제에서 더 큰 규모로 생길 것이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계획경제의 주요한 위험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소비자 대표를 생산계획과 연결시키는 것을 통해 이러한 경향을 지속적으로 막는 게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소득이 올라가 모두가 대체할 수 있는 필수재와 값싼 사치재에 지출할 수 있는 잉여분이 생길 경우, 그 결과로 선택의 자유가 확대되어 계획 당국이 소비자에게 원하지 않는 것을 사도록 설득하려는 경향을 넘어설 것이다.

계획경제는 수요의 불확실성의 두 번째 원인 — 소득분배에 관한 불확실성 — 을 대체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된 소득 구조의 기초 위에서 활동하며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 자원을 정규적으로 사용한다는 고정된 의도를 가진 계획 당국은 완성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총 화폐 구매력이 얼마인지, 그리고 넓게 보아 이 총액이 서로 다른 규모의 소득으로 어떻게 나뉘는지를 미리 알게 될 것이다. 계획 당국은 이 지식을 가지고 무계획경제에서 완벽한 독점가들이 보통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서로 다른 유형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능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독점가들은 언제

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쓰이게 될 총 구매력과 그 분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예외적일 정도로 비탄력적이지 않다면, 주어진 가격수준 혹은 주어진 공급에 따라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가격에 그가 팔 수 있는 양을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계획경제는 소비자의 절대적, 상대적 소득 규모의 변화는 없는 가운데 소비자의 취향 변화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소득 규모의 변화가 계획의 일부를 이루고, 따라서 생산을 추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일 뿐이다. 물론 내가 계획 당국이 모든 개인 소득의 정확한 규모를 미리 알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불필요한 일이다. 필요한 것은 소비자의 재화와 서비스 지출에 사용될 수 있는 총 구매력에 관한 지식과 서로 다른 규모와 유형의 소득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관한 광범위한 일반 지식이다. 요컨대 도시와 농촌의 소득은 서로 다른 수요의 배분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계획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계획경제가 소득분배를 어떻게, 어떤 비율로 제공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오늘날의 무계획경제에서 소득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소득은 모든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에 현재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준다. 또한 소득은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자본축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일부 저축과 투자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과 기타 법인체들이 총액의 일부를 준비 계좌에 넣어 두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 법인체의 저축은 개인소득이 되는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는 부자들이 지출할 욕망이 크지

않은 부분을 저축한 것을 통해서이든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나 노령이나 자식의 새 출발 자금을 위해 저축한 것을 통해서이든 여전히 개인소득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소득으로 벌어들인 총액은 소비재와 서비스의 현재 공급을 구매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비율의 투자재이기도 하다.

계획경제에서는 경제계 내에서 이러한 심각한 장애의 원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계획된 산업에 대한 투자는 개인들에게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라는 호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적 소득이 분배되기 이전에 투자재의 충분한 공급을 획득할 필요가 있는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분배된 소득은 그러한 재화의 구매를 감당할 필요가 없고 모두 소비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원할 경우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계획경제에서 사람들이 저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 저축에는 이자가 붙지 않을 것이다. 국가는 이런 저축을 예치금으로 받을 준비를 할 것이며, 요구받을 경우 지출을 위해 다시 내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집단적 저축을 넘어서서 집단적 저축에서 해당하는 감소에 의해, 그리고 현재의 소득 분배에서 해당하는 증가에 의해 저축한 시민의 성향에 부응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정 시기에 그 저축을 인출하는 경향이 있다면 계획 당국은 현재의 소득분배로부터 유보된 액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상황을 조정할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계획 당국이 자본축적과 소비의 적절한 균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한 체제 하에서는 계획 당국 자체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아

나라면 과잉 저축과 과소 저축 모두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상 시민에게 분배되는 총소득이 현재 공급되는 소비재와 서비스를 구매하기에 충분하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소득분배는 어떤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현재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생산에 대한 실질적 기여나 귀속된 기여에 대한 지급 혹은 국고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가는 “구호품dole”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구호품”이라는 용어는 연금, 보험금 지급, 빈민 구조 등등은 물론 공적 부채에 대한 이자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 체제의 결과는 어떤 이유로든 생산이 줄었을 경우 소득도 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 구호품이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존재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지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생산 자원을 덜 사용할 경우 이는 저절로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생산이 증가하기 전까지는 소득이 증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을 통해 추가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기 전까지는 생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계획경제는 다른 쪽 끝에서 이용 가능한 생산 자원으로 생산될 수 있는 모든 소비재와 서비스를 계획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분배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자본재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양을 남겨 둘 것이다. 계획된 총생산물만이 아니라 계획된 총소득도 있을 것이며, 계획의 목표는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소득은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두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 수행한 일에 대한 지급. 그리고 “구호품doles” 혹은 좀 덜 윤색한 이름을 쓰자면 “사회배당social dividend”이다. 나는 분배 체제가 이 둘의 결합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결합이라고 생각한다. 자본 소유자에게 보충적인 수당을 주는 과도기가 지난 후에는 공적 부채와 사적 투자에 대한 이자 지급은 모두 중단될 것이며, 그런 것들은 자본축적의 집단적 공급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것은 생산에 대한 귀속 기여에 대한 소득 지급이라는 큰 규모의 항목을 없앨 것이며, 현재 지방세와 국세로 재원이 마련되는 큰 규모의 구호품 또한 없앨 것이다.

넓게 보아 두 가지 소득 원천 - 노동과 시민권 - 이 있을 것이다. 소득은 부분적으로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분배될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사회배당”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분배될 것이다. 사회배당은 개별 시민이 생산력이라는 공동의 유산에 대해 소비자로서 몫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계획경제에서는 총소득 가운데 첫 번째 방식으로 분배되는 비율이 꾸준히 줄어들고 사회배당의 액수가 꾸준히 확대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배당의 분배와 관련해서 나는 필요라는 기초가 가능한 기초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 목표는 가능한 한 빠르게 배당을 늘려 모든 시민의 최소한의 필요 전체를 포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시민의 권리로서 지급되는 이 배당은 모두에게 혹은 모든 성인에게 동등한 금액일 것이며, 여기에 적절한 아동수당이 부가될 것이다. 이 배당은 처음부터 최소한 공동체 내의 모든 가족에 최소한의 물리적 필수재를 포괄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현재의 생활비 수준에서 잠정적으로 배당을 모든 성인에게 매주 30실링, 15세 이상의 모든 청년에게 15실링, 모든 아동에게 10실링을 준다고 해 보자. 총액은 대략 2,750,000,000파운드 혹은 현재 추정된 국민소득의 2/3 이상일 것이다. 자본축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제하면, 쓸 수 있는 소득의 균형은 수행한 일에 대한 지급으로 분배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 절대다수는 분명 봉급이나 임금보다 사회배당을 통해 얻는 소득이 더 많을 것이다. 소득은 수단이 될 것인데, 지금처럼 생활의 기초적인 필수재를 공급하는 수단이 아니라 최소 이상의 잉여를 향유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소득은 계속해서 불평등할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의 정도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벌 수 있는 최대가 자신의 사회배당 정도일 경우, 거의 공통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를 벌기 위한 유인은 오늘날의 계급 지배 사회에서 몇 배를 더 벌기 위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소한 사치품에 대한 수요와 대체할 수 있는 필수재의 더 많은 공급은 모든 인간적 수요 가운데 간절한 것이기 때문이다. 매우 높은 화폐적 유인의 필요는 계급 불평등의 산물이지만 인간 본성의 산물이 아니다. 인간이 더 이상 힘을 위한 수단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없거나 다수의 생활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희망을 품을 수 없게 된다면 이러한 필요는 종식될 것이다.

그러한 체제 하에서는 소득이 점점 더 “용돈pocket-money”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며, 소득의 절대적 평등 같은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유인을 상실시키지 않을 것이다. 노동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주된 부분은 더 이상 산업의 부산물로 분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조건 하에서 수요의 큰 부분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기본적인 필요는 개인의 변덕에 크게 의존하지도 급격한 변화에 따르지도 않는다. 각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변할 것이다. 그러나 평균의 법칙은 생산 영역의 많은 부분에

걸쳐 시장 수요에 대한 아주 안전하고 정확한 지침이 될 것이다. 불확실성은 주로 소득의 지출에서 생길 것이다. 즉 국민적 최소인 사회배당보다 더 높은 소득의 지출에서 생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조차 단기적으로는 평등에 더 가깝게 가려는 접근법이 불확실성을 훨씬 적게 할 것이다. 계획 당국이 지속적으로 유행의 변화를 추적하고, 예측의 오류가 매우 좁은 범위 내에서만 발생하도록 하고, 발생할 경우 즉각 발견해서 교정할 수 있도록 생산계획을 짤 때 유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좀 더 현실적인 텐데, 왜냐하면 오류는 일차 생산보다는 완제품 생산을 할 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원료와 반제품을 한 공정에서 다른 공정으로 옮김으로써 오류를 빨리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제품 생산의 자본 구조는 기초 산업의 자본 구조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그리고 기계와 공장을 단기 목적에 쓰는 것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고 더 완고하지 않게 함으로써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계획 당국의 정책 가운데 일부가 되어야 한다.

시대